



# EU국가의 일반데이터 보호 규정 개정 내용

안소영 연구원

EU 집행위원회에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대체하는 EU 국가의 일반데이터 보호 단일 규정 개정안이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됨. EU에서는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되고 있음.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보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상호 충돌을 줄이는 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임

## ■ 세계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시대로 빠르게 부상 중임

- 데이터 경제란 데이터의 적절한 사용으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창출되는 가치를 의미함<sup>1)</sup>
- 시가총액이 높은 글로벌 10대 기업 중 IT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2012년 2월 기준 3개, 2018년 2월 기준 7개인데, 이 자료는 전 세계에 걸친 데이터 경제의 빠른 확산을 보여줌<sup>2)</sup>

## ■ 데이터 경제 규모는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요구됨

- 2016년 유럽 데이터 경제 규모는 3,000억 유로로 만약 적절한 입법 및 정책조치가 시행된다면, 그 가치는 2020년까지 EU GDP의 4%인 7,390억 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sup>3)</sup>
- 국내의 경우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 개념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국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 시장규모는 2016년 13조 6,832억 원으로 2015년 대비 2.5% 성장함<sup>4)</sup>
- 데이터 경제의 부상에 따른 데이터의 활용이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반면, 다양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PRISM 사건<sup>5)</sup>과 같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1) EU(2017), "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

2) 한국거래소(2017),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0사 변동 현황」; CNBC 데이터 참고

3) EU(2018), "Data in the EU: Commission steps up efforts to increase availability and boost healthcare data sharing"

4) 데이터산업 시장은 전통적인 DB산업을 아우르는 기존 조사 범위를 적용한 것으로 데이터를 매개로하는 광고 매출, DB 시스템 구축 용역 매출 등 DB 관련 간접 매출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광의의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를 산출한 것 (출처: 한국데이터진흥원(2017), 『2017년 데이터산업 백서』)

위험이 존재함

■ EU 집행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와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이동을 위해 일반데이터 보호 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개정함

- 일반데이터 보호 규정은 유럽연합에서 회원국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통합규정으로, 95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을 대체하는 규정임
-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 강화,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강화와 책임강화, 강력한 과징금 부과, 정보주체의 권리강화 등이 포함됨

〈표 1〉 개정법안 주요 변경사항

구분	EU 개인정보보호 지침 (95)	EU 일반데이터 보호 규정(2018. 5. 25~)
법 적용 대상	EU 회원국의 영토를 기준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사항	EU 내 법인은 물론 EU 시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 규정이 적용됨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는 직·간접적으로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의 정보 식별번호 혹은 자연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지위에 관한, 하나이상의 요인을 참조하여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	식별 가능한 자연인의 이름, 위치정보와 같은 식별자와 함께 온라인 식별자 정보 (IP주소, 쿠키, 기계고유식별정보, 시리얼 넘버 등), 유전자 정보 등도 포함
처벌	회원국들이 자유롭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최대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의 2~4% 또는 1~2천만 유로 (약 250억 원) 행정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강제규정으로 강행)

자료: 한국무역협회(2017), 「GDPR이 유럽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EU GDPR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변화」

■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의 보장 및 경제 활성화 기여 간 균형을 위한 규정(Regulation) 수립임

- 일반데이터 보호 규정의 핵심은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것임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외 데이터 활용 등의 다른 기본권 또한 존중할 것을 명시함
  - 기본적인 정보보호 지침(Directive)에 그치는 것이 아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단일 규정 (Regulation)으로 개정함에 따라 EU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을 활성화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여 데이터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sup>6)</sup>

5) 미국 국가 안보국이 2007년부터 시작한 국가 보안 전자 감시체계인 프리즘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의 전직 CIA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대량 정보 수집 범위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미치고 있으며 구글, 애플, 야후,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기업의 협조에 의해 수집되었다고 폭로한 사건임

6) 이전에는 EU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28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했으나, 개정법안의 단일 규정 시행을 통해 얻는 경제적 효과는 매년 약 23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출처: EU(2015), “Questions and Answers-Data

-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의 보장을 기반으로 한 일반데이터 보호 규정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유럽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국민 의료 데이터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시민중심 보건 시스템의 구축과 개인맞춤형(Personalise)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유럽 수준에서 해야 할 구체적 목표방안을 수립함
- 한국에서도 정보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첫 국가공인 자격증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표 2〉 국민 의료 데이터보호 및 활용 관련 구체적 목표방안 (’18. 4. 25)

시민중심 보건 시스템의 구축	개인맞춤형 (Personalise) 진단 및 치료
2022년까지 유럽 연합에서 최소 1백만 개의 게놈 염기서열 (Sequenced Genomes)에 대한 접근을 제공 (현재 14개국 참여)	시민의 자유로운 전자 건강 기록 접근과 국경을 초월한 개인건강기록의 공유
시민들의 전자 건강기록이 어떻게 유통되고 공유가능한 지에 대한 기술적 사양 권고	유럽의 공유 데이터 인프라를 통한 개인맞춤형 (Personalise) 의료 진단 및 전염병 예측
“eHDSI(eHealth Digital Service Infrastructure)”를 포함한 프로그램 범위 확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	의료 통합 시스템 내에서 개인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도구 제공

자료: EU(2018),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healthcare”

- EU의 개정안은 전 세계 데이터정보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규제 개정이 산업과 개인정보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 **kiri**